

소방공무원 2500여명 '자살위험군'

자해 시도 1500명 ↑...PTSD·수면장애 등 겪어

전체 소방공무원의 5% 가량인 2500여 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위험에 놓였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시도한 소방공무원 숫자도 15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 설문조사'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를 28일 밝혔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프로그램을 활용해서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설문대상자 5만755명 중 95%인 4만8008명이 응답했다.

1차 설문은 외상사건 노출 경험,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 자살 사고, 자해 행동을 조사했으며 2차는 삶의 질(만족도),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에 관하여 조사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달 4대 주요 스트레스인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에분야를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4분의1에 가까운 소방공무원들이 수면 및 음주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그간 일반인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이를 깊이 살펴보고자 삶의 만족도, 자해 시도 등 항목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9%(2453명)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자해 시도 항목으로 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직원이 3.1%(1556명)로 나타났다.

특히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0.1%인 53명이 "예"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주요 4대 스트레스 현황을 살펴보니 PTSD 54.7%, 수면장애 81.1%, 음주습관에 62.3%, 우울증 67.9%로 전체 평균에 비해 2배~3배 정도 높았다. PTSD 또한 10배나 높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전체 4만8469명 중 3023명(6.3%)가 낮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친절히 응대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원응대 과부하'에 따른 관리 필요군은 29.4%(1만433명), '심리적 손상'은 20.3%(9832명)로 나타났다.

업무분야별 감정노동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119상황실, 현장출동 횡수가 많은 구급대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화재조사 순

로 부하량이 많았다. 소방청은 "충격적인 현장 상황과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고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규칙이 초래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각종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소방복합치유센

터를 조속히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오는 2021년 충북 음성 지역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뉴스1



거북아 바다로 가자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열린 바다거북 방류행사서 아쿠아플라넷 관계자들이 바다거북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건축현장 안전불감증 '여전'...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서울 상도동 유지원 흙막이 붕괴사고,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닳음에도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반·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먼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 처리하는 등 건축허가 부작정 사례가 있었다.

또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을 확인하지 않

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흙막이 가시시설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위험(3개 현장)이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흙막이 없이 굴착하고 안전 기둥을 준수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상이 나왔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간판,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점검결과 드러났다.

행안부는 최근 2년 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총 2만5120건의 건

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해 126개 업체 총 211건의 위·변조 사례를 확인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정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광주시,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점검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9월2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석 연휴 이전 홍보·계도, 연휴기간 감시·단속, 연휴 이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처리시설과 환경오염 사고 우려지역 등에 대

해서는 시와 자치구 간부공무원이 방화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9월2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연휴 이전에는 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자가 자율점검토록한다.

30여개 다량폐수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는 7개조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 관련 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슈 판결

'아내 성매매시키고 어린 딸들 추행' 법원, 40대 남성 징역 10년

재판부 "혐의 모두 인정...반인륜적 범행에 죄질 나빠"

수년간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영상물을 순화방송 등에 유통시켜 3년 간 어린 딸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환)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의 아동성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전자발찌 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수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아이들 들도 던지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며 "성매매를 강요 당하고, 자녀 추행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훈육 감시 당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 당한 과정에 있어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도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을 당한 자녀들도 어린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부위와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진부를 상대로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조사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피고인은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1~12세 초등학생인 딸들에게 보여준 40대 남성에 중환이 신고됐다. 이남성은 성교육 등을 핑계로 수년간 어린 딸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범행에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재판은 피해자들의 신상 노출을 꺼린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첫 재판에 이어 재판 내내 폭행과 협박으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녀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다.

아내가 2009년 자신의 상해 사건 합의금 100여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 하에 성매매에 나섰다. 자녀 추행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훈육 과정에서 스किन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이 중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반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판 위험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성매매방지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간이 혼란하시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